

“도곡동 땅 차명 확실” “北에 수십조 퍼주기”

김국방 “NLL 양보 없다”

“해상불가침경계선 원칙 공동어로 논의”

국감 첫 날부터 ‘검증’ 변질

17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대선 국감’으로 변질했다. BBK 사건 등 이명박 후보 의혹 사건, 한반도 대운하, 남북정상회담, NLL(북방한계선) 재조정 가능성 등을 놓고 한나라당과 통합신당 소속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李후보 의혹·정상회담 성과 등 충돌 “NLL은 명백한 영토선” 재조정 공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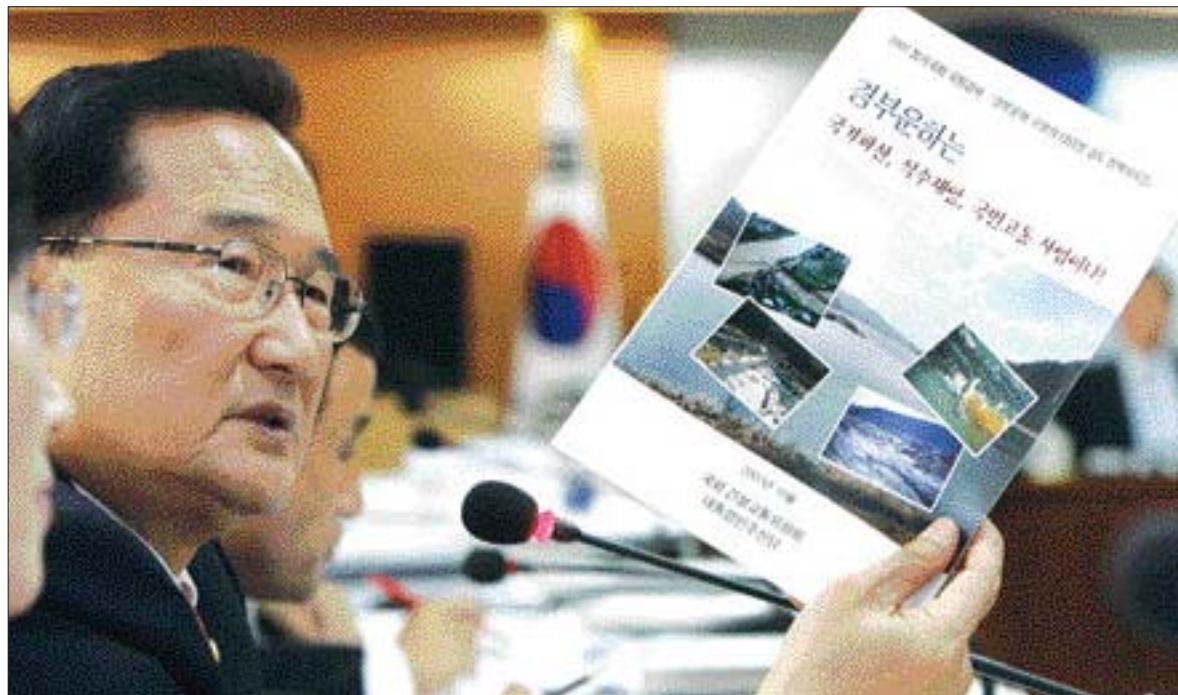
◇이명박 후보 의혹 공방=이날 재경부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신당 문석호 의원은 “등기부상의 도곡동 땅 소유자인 김재정 이상은씨의 투자 비율은 53 대 47이라고 했는데 95년 매각대금 263억원 중 80억원만 이상은씨에게 송금했다가 5년 뒤인 2001년 2월 추가로 58억원이 송금됐다”며 “이는 두 사람의 자금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고, 결국 이 땅이 이명박 후보의 차명소유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십조원을 재원을 퍼붓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영호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서 “경부운하의 통행시간도 최소 50시간 이상으로 철도·도로의 6시간보다 8.3배나 더 소요된다”며 “목적성을 상실한 경부운하 건설은 환경과파괴를 포함하여 복구가 없는 대재앙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LKe뱅크(대표이사 이명박), BBK투자자문(대표이사 김경준)의 읍서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을 보면 가공의 외국인과의 국법인이 마구잡이로 등장하고 있는데 재경부는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대운하 공약의 타당성을 조사한 건교부 산하기관 TF의 보고서 내용을 들어 “물동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골재량 개발가능량과 수송시간, 수자원 이용편의 등 실제 사실을 왜곡한 부분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BBK 관련 사건은 이미 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이 후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 논란=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감에서는 신당 주승용 의원은 “이 후보 측이 제시한 경부운하 예상 물동량을 기준으로 산출해 보면 경부운하에 다니는 배는 하루에 11.87척밖에 안 된다”며 “12척의 배가 오가는 사업에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이 경부운하에 관한 건교부장관의 의견을 물으며 관련 책자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라는 말을 싫어한다고 해서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당 최 성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 이남복정상선언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 ‘자금수요는 최대 112억 달러지만 경제적 효과는 1천 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왜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는 비용문제만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국방위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맹정규 의원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맞는지 의심을 했다”며 “NLL은 역사적, 국제법적, 남북기본합의서 상으로도 우리의 분명한 영해선이자 영토

선”이라고 강조했다. 신당 박찬석 의원은 NLL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채 “해주직할로 문제를 한강하구 개발 등에 대한 군사적 신뢰보장이 이뤄지면 남북 간 긴장완화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남북을 가르고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NLL을 서해상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등을 통해 항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정착 시키겠다는 발상전환과 구상은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만약 NLL을 재조정한다면 당연히 유엔군사령관과 토의 협의해야 할 것이지만 해상불가침경계선은 남북간에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유엔군사령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장관은 “군수뇌부가 NLL 합군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는 질문에 대해 “각 군 총장과 간담회과정에서 유니폼(군복) 입은 사람들이 NLL과 관련해 이렇듯 저러공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에히부대 간부들이나 지휘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관이 알아서 할테니, 유니폼 입은 사람들은 임무에 전념토록 하라고 했다. 해군 2함대 간부들에게도 발언을 자제하도록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BBK 증인 채택’ 공방 몸싸움 정무위 개기도 못한채 하루종일 파행

국회 정무위는 17일 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증인 ‘강행채택’ 문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개기도 못한 채 하루종일 파행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전부터 정부 중앙청사 19층에 마련된 국감장의 위원장석을 차지한 채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감 진행을 막았다. 한나라당은 위원장석 주변에 ‘불법증인 채택 무효’ ‘박병석 폭력위원장 즉각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지난 11일 국감증인 채택 당시의 몸싸움 사진 등을 전시했다.

11일의 증인 참고의 의결은 안전부준재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박 위원장의 사퇴와 신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의원이 재차 “한나라당의 국감방해는 BBK와 도곡동 땅 의혹 등 이명박 후보의 각종 의혹

에 대한 검증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국감 파행의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고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박병석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려는 순간, 한나라당 이원기 수석전문위원이 ‘불법증인 채택무효’라는 피켓을 박 위원장 머리 위로 들어올리면서 이를 막으려는 통합신당 김태년 정무위 의원 등과 10여분간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감증인 강행채택과 관련, 박병석 정무위원장의 사퇴 등을 요구하며 위원장석을 점거하자 박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盧대통령 “한 번도 패배주의에 빠진 적 없어”

오마이뉴스에 반박 편지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가 ‘인물연구 노무현’ 시리즈에서 노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잃은 데서 비롯된 패배주의의 발로라고 분석한 데 대해 “20년 정치 생애에서 여러 번 패배했지만 한 번도 패배주의에 빠진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보낸 편지 형식의 반박문에서 “대연정 제안은 이미 후보 시절부터 준비해온 것”이라며 “동거정부, 대연정 등의 대타협 정치가 아니고는 우리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는 나의 필생의 정치 목표, 나는 여기에 내 모두를 걸었고 그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작 아직도 이 목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국민이 어떤 평가를 하든, 이 문제가 해결되거나 큰 진전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성공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지역구도 해소와 대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생각으로 정치를 해왔다. 동거정부 구상, 대연정 제안, 개헌 주장 등 모두 이 목표를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거는 것은 결코 패배주의의 결과도 아니고 성급한 성과주의도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생각한 것, 정국을 끌고가기 어렵다고 생각한 사실을 패배주의의 근거로 봤다면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